

경기도 입법예고 제2021-1호

「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「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1월 13일
경 기 도 지 사

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행정심판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중요사건에 대해 주심위원을 2인 이상으로 하고, 심리자문관 운영 규정 등을 신설하여 도민의 권익구제에 기여코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위원을 지정할 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고, 법 제7조제4항의 자격을 갖춘 위원이 골고루 포함되도록 함.(안 제4조제2항 후단 신설)
- 나. 중요사건의 경우 주심위원을 2인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함
(안 제6조제4항)
- 다. 위원회의 심리를 보조하기 위하여 심리자문관을 둘 수 있도록 함
(안 제6조의2 신설)

- 라. 당사자의 증거조사 신청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적어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함
(안 제7조제4항 신설)
- 마. 구술심리 신청이 불허가된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당연직 위원 또는 심리자문관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고, 이 경우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(안 제8조제2항)
- 바.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에게 적극적으로 조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, 위원장은 조정 전담위원을 지명하여 조정절차에 관한 상담과 조언을 할 수 있음
(안 제8조의2 신설)
- 사. 위원회는 재결서에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필요적 사항을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하며, 재결서는 이해하기 쉽고 알기 쉬운 우리말을 쓰도록 노력하여야 함(안 제8조의3 신설)
- 아. 심판당사자는 위원에게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심리·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이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함
(안 제15조의2 신설)
- 자. 위원회는 인용재결을 한 경우 법 제49조, 제50조 및 제50조의2에 따른 재결의 기속력, 직접처분, 간접강제 제도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며, 위원회는 인용재결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행조치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(안 제15조의3 신설)
- 차.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「형법」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봄(안 제15조의4 신설)
- 타. 간사장은 위원회의 심리내용을 속기로 작성하여 회의록으로 보

존하여야 함(안 제15조의5 신설)

파. 회의는 비공개가 원칙이나, 위원회의 심리·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요사건 및 구술심리 사건 심리의 경우 위원 및 당사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공개할 수 있음
(안 제15조의6 신설)

3. 자치법규안 : 별첨

4. 의견제출

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(참조 : 행정심판담당관, 주소 :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, 전화 : 031-8008-2163, 팩스 : 031-8008-2857, 전자메일 : pwkcs@gg.go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위원을 지정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고, 법 제7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 골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위원장은 미리 안건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을 주심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고, 중요한 건의 경우 주심위원을 2인 이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안건을 검토한 주심위원에게 그 검토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게 하여 심의할 수 있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심리자문관)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리를 보조하기 위하여 심리자문관을 둘 수 있다.

② 위원장은 위촉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심리자문관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.

③ 심리자문관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
1. 중요사건의 자문
2. 증거조사 지원
3. 조정 및 구술심리 지원
4. 재결서 작성 자문

④ 위원장은 심리자문관을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.

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위원회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적어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. 다만, 증거조사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재결서 이유에서 증거조사 결과를 표시하여야 한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구술심리) ①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구술심리를 할 수 있다.

② 위원장은 구술심리 신청이 불허가된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당연직 위원 또는 심리자문관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위원장은 구술심리를 하는 경우에는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.

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조정권고)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에게 적극적으로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.

② 위원장은 조정 전담위원을 지명하여 조정절차에 관한 상담과 조언을 하게 할 수 있다.

제8조의3(재결의 방식) ① 위원회는 재결서에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필요적 사항을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재결서에 적는 이유를 읽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게 알기 쉬운 우리말로 쓰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2(위원의 기피·회피) ① 심판당사자는 위원에게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심리·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.

② 위원은 제1항의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③ 위원장은 안건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심판 당사자 및 위원에게 기피신청 및 회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제15조의3(재결의 실효성 확보) ① 위원회는 인용재결을 한 경우에 법 제49조, 제50조 및 제50조의2에 따른 재결의 기속력, 직접처분, 간접강제 제도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인용재결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행조치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.

제15조의4(위원의 공무원 의제)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「형법」
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.

제15조의5(회의록) ① 간사장은 위원회의 심리내용을 속기로 작성하여
이를 회의록으로 보존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회의록은 비공개로 하고, 재결서 작성 외에는 이용할 수
없다.

제15조의6(심리의 공개) ①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리·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
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요사건 및 구술심리 사건의 심리를 공개
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 및 당사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회의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인터넷방송 등
으로 생중계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국		기획조정실
소 관 부 서	실·과장 직위·성명	행정심판담당관 임보미
	팀장 직위·성명	행정심판기획팀장 최종구
	담당자 성명·전화	지방행정주사 김청수(8008-2163)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조(회의) ① (생략)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 명의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 의 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(<u>후단 신설</u>) ③ (생략)	제4조(회의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이 경우 위 원을 지정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고, 법 제7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 골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③ (현행과 같음)
제6조(안전의 사전검토) ① ~ ③ (생략) ④ 위원장은 미리 안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참가하는 위촉위원을 주심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고, 지정된 주심위원은 그 검토내용 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<u><신 설></u>	제6조(안전의 사전검토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위원장은 미리 안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을 주심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고, 중요안전의 경우 주심위원을 2인 이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.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안전 을 검토한 주심위원에게 그 검토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게 하여 심의할 수 있다.

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6조의2(심리자문관)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리를 보조하기 위하여 심리자문관을 둘 수 있다.</p> <p>② 위원장은 위촉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심리자문관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.</p> <p>③ 심리자문관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중요사건의 자문 2. 증거조사 지원 3. 조정 및 구술심리 지원 4. 재결서 작성 자문 <p>④ 위원장은 심리자문관을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.</p>
<p>제7조(증거조사 및 의견제출) ① ~ ③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7조(증거조사 및 의견제출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위원회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적어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. 다만, 증거조사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재결서 이유에서 증거조사의 결과를 표</p>

	<u>시하여야 한다.</u>
<u>제8조(구술심리) 위원장은 구술심리를 하는 경우에 피청구인 소속 6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.</u>	<u>제8조(구술심리) ①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구술심리를 할 수 있다.</u> <u>② 위원장은 구술심리 신청이 불허가된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당연직 위원 또는 심리자문관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u> <u>③ 위원장은 구술심리를 하는 경우에는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.</u>
<u><신 설></u>	<u>제8조의2(조정권고)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에게 적극적으로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.</u> <u>② 위원장은 조정 전담위원을 지명하여 조정절차에 관한 상담과 조언을 하게 할 수 있다.</u>
<u><신 설></u>	<u>제8조의3(재결의 방식) ① 위원회는 재결서에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필요적 사항을 성실하게 기재하</u>

	<p><u>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② 위원회는 재결서에 적는 이유를 읽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게 알기 쉬운 우리말로 쓰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
<u><신 설></u>	<p><u>제15조의2(위원의 기피·회피) ①</u></p> <p><u>심판당사자는 위원에게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심리·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위원은 제1항의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③ 위원장은 안건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심판 당사자 및 위원에게 기피신청 및 회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</u></p>
<u><신 설></u>	<p><u>제15조의3(재결의 실효성 확보) ①</u></p> <p><u>위원회는 인용재결을 한 경우에 법 제49조, 제50조 및 제50조의2에 따른 재결의 기속력, 직접처분, 간접강제 제도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.</u></p> <p><u>② 위원회는 인용재결에 대한 피</u></p>

	<u>청구인의 이행조치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.</u>
<u><신 설></u>	<u>제15조의4(위원의 공무원 의제)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「형법」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.</u>
<u><신 설></u>	<u>제15조의5(회의록) ① 간사장은 위원회의 심리내용을 속기로 작성하여 이를 회의록으로 보존하여야 한다.</u> <u>② 제1항의 회의록은 비공개로 하고, 재결서 작성 외에는 이용할 수 없다.</u>
<u><신 설></u>	<u>제15조의6(심리의 공개) ①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</u> <u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리·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요사건 및 구술심리 사건의 심리를 공개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 및 당사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</u> <u>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회의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인터넷방송 등으로 생중계할 수 있다.</u>

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

제1조(목적)이 규칙은 「행정심판법」 제6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원회의 구성)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경기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 또는 지명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[전문개정 2019.07.26.]

1. 위촉위원 : 도지사가 「행정심판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촉한 사람.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. [전문개정 2019.07.26.]

2. 지명위원 : 행정(1)부지사, 기획조정실장, 정책기획관 [전문개정 2019.07.26.]

② 제1항에 따라 위촉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도지사가 교부한다. <개정 2019.3.13.>

제3조(위원장의 직무 및 대행)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의 직무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행정(1)부지사가 대행한다. [전문개정 2019.07.26.]

③ 행정(1)부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때에는 기획조정실장, 정책기획관 순으로 대행한다. [신설 2019.07.26.]

제4조(회의)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장이 원활한 심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에서 한 사람을 지정하여 그 회의를 진행하게 할 수 있다. [신설 2019.07.26.]

제5조(간사장 및 간사)① 「행정심판법 시행령」 제9조제2항에 따른 간사장은 행정심판담당관이 되고, 간사는 행정심판 업무담당 공무원이 된다. <개정 2017.5.8.>

② 간사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, 간사는 간사장을 보좌한다.

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의에 부친 심의안건에 관한 사실관계 등을 설명할 수 있다.

제6조(안건의 사전검토)① 간사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서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답변서를 심리기일 14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, 법 제33조제1항,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 등을 심리기일 3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당사자의 보충서면 제출기한은 심리기일 7일 전까지로 한다.

③ 간사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와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조치를 하여야 하며, 회의 종료와 동시에 제출한 모든 자료를 회수하여야 한다.

④ 위원장은 미리 안건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참가하는 위촉위원을 주심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고, 지정된 주심위원은 그 검토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7.5.8.]

제7조(증거조사 및 의견제출)① 위원장은 위원 또는 행정심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증거조사를 명할 수 있고, 증거조사를 한 경우에는 증거조사서를 작성하여 심리기일 3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

여야 한다. <개정 2017.5.8.>

② 위원회는 행정심판사건과 관련 있는 도지사 소속부서 및 직속기관·사업소(이하 “부서 등”이라 한다)에 서류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요구를 받은 부서 등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행정심판청구의 적법여부
2. 행정처분사유(사실관계 및 근거법령)의 적법여부
3. 그 밖에 심리 및 재결에 필요한 사항

제8조(구술심리)위원장은 구술심리를 하는 경우에 피청구인 소속 6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2.6.1.>

제9조(보정요구)법 제32조에 따른 보정기간은 14일로 한다. 다만,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.

제10조(수당 등 지급)① 도지사는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안전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「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범위에서 수당·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② 위촉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,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(위임전결)위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지명위원 중 기획조정실장(기획조정실장이 전결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책기획관이 전결 처리한다), 간사장, 5급 공무원인 간사에게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, 단위 업무별 전결 구분은 별표 1과 같다. [전문 개정 2019.07.26.]

제12조(사건번호 및 사건명)① 위원회는 행정심판 본안청구 및 집행정지신청이 접수된 경우 지체 없이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부여한다.

② 본안청구의 사건번호는 심판청구가 접수된 연도의 넷째 자리 다음에 “경기행심”을 표기하고, 이어서 접수 시에 부여된 일련번호로 구성한다. <개정 2019.3.13.>

③ 집행정지 신청의 사건번호는 접수된 연도의 넷째 자리 다음에 “신청”을 표기하고, 이어서 접수 시에 부여된 일련번호로 구성한다.

④ 본안청구의 사건명은 청구인의 청구취지와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령상의 처분명과 심판의 종류를 결합하여 간결하게 부여한다.

제13조(심리의 병합)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심판사건을 직권으로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.

1. 피청구인이 한사람에게 한 다수의 처분에 대하여 각각 심판청구를 한 경우

2. 피청구인이 여러 사람에게 한 동종의 처분에 대하여 각각 심판청구를 한 경우

제14조(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위촉 등)① 위원장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「변호사법」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중 20명 이내의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를 위촉한다. 다만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0명을 초과하여 위촉할 수 있다.

②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를 위촉할 때,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제2조에 따라 위촉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은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로 위촉될 수 없다.

④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명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한다.

⑤ 위원회는 국선대리인 선정예정자의 해당 사건과의 이해관계 유무, 청구인의 주소 등을 고려하여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명부에 등재된 순서에 따라 국선대리인을 선정한다.

⑥ 제1항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도지사가 교부한다.

[본조신설 2019.3.13.]

제15조(국선대리인 보수 지급)① 「행정심판법 시행령」 제16조의5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보수 지급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② 국선대리인 보수를 지급받으려면 국선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에 대하여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의 취하서가 위원회에 제출된 날 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재결서의 정본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사건명, 사건번호, 국선대리인의 인적사항, 국선대리인으로서의 직무활동내역 등을 기재한 보수 지급 청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위원장은 제2항의 보수 지급 청구서를 심사하여 2주 이내에 국선대리인 보수를 지급한다.

[본조신설 2019.3.13.]

제16조(운영세칙)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7.5.8.]

단위업무별 전결구분(제11조 관련)

단 위 업 무 명	결 재 구 분			
	간 사	간사장	지명위원 (<small>기획조정실장</small>)	위원장
1. 위원회의 회의구성 및 개최의 통지(법 제7조)				○
2. 대표자의 선정권고 (법 제15조)		○		
3. 청구인의 지위승계허가(법 제16조)		○		
4. 피청구인의 경정 등(법 제17조)		○		
5. 대리인의 선임허가(법 제18조)		○		
6. 국선대리인의 선정 여부 결정 및 통지(법 제18조의2)			○	
7. 위원회의 참가허가 또는 요구(법 제20조, 제21조)			○	
8.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의 변경허가 여부 결정(법 제29조)		○		
9. 집행정지의 결정(법 제30조)			○	
10. 임시처분의 결정(법 제31조)			○	
11. 보정요구 등(법 제32조)		○		
12. 답변서 및 보충서면의 송달(법 제24조, 제33조)	○			
13. 구술심리의 결정 등(법 제40조)		○		
14. 증거서류의 송달(법 제34조)	○			
15. 증거조사 등(법 제36조)		○		
16. 심판청구의 병합·분리결정(법 제37조)		○		
17. 조정개시 결정(법 제43조의2)				○
18. 재결기간의 연장통지(법 제45조)		○		
19. 심리기일의 통지(법 제38조)		○		
20. 증거서류 등의 반환(법 제55조)		○		
21. 국선대리인 선정 취소, 사임허가 및 재선정(영 제16조의4)			○	
22.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위촉(영 제16조의6)				○
23. 재결에 오기·계산착오 등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의 재결의 경정결정(영 제31조)			○	
24. 심판청구내용의 도 업무 관련부서에 대한 의견조회(제7조)	○			